

사설

불교시민단체 지원 환영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시민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공모하고 8개의 사업에 300만~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계종의 사업비 지원에 대해 우리는 불교시민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매우 크다. 행정학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를 '제3섹터'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한 사회의 운영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를 천다. 한때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부정적 행동으로 오해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시민단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구로서 인식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시민단체가 하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 기업, 언론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집단에 대한 감시활동도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불교시민단체의 활동은 포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훌륭한 방법이다. 물론 이들 단체들이 불교의 포교를

주목적으로 삼고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에 실현하고자 하는 방편으로서의 활동이다.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조계종총무원이 나선 것은 늦기는 했지만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지원금이 많지 않다고 해서 생색내기용이라고 폄하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지원금의 액수를 차차 늘려 불교시민단체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수준까지 이르게끔 조계종에 당부한다.

불교시민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그런 단체를 육성하는 일이 조계종만의 일은 결코 아니다. 여러 종교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불교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종단간에 경쟁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 경쟁하는 것이 답답지 않다면 26개 종단의 협의기구인 종단협의회가 나설 수도 있다. 종단협의회에서 불교시민단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중앙승가대 정상화 해법없나

조계종 도제양성의 요람 중앙승가대가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중앙승가대가 새롭게 도약의 꿈을 안고 김포학사로 옮겨 김포학사의 존공과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성대히 봉행된 것이 불과 얼마전인데 취임한 지 7개월 밖에 안된 총장 증봉스님이 사의를 표했고, 교직원들 월급까지 못주고 심지어는 단전 단수위기까지 몰릴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 불전국역연구소와 사회복지연구소 등 중앙승가대를 떠받치는 전문연구기관들이 이미 문을 닫은 상태고 다른 부속기관들의 폐쇄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라니 대학이라는 허울만 남은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기 그지 없다.

전통강원회 현대 대학교육의 두가지 장점을 모두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승가대가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책임은 우선 종단에 있다고 하겠다. 조계종이라는 불교계 최대 종단에서 종립 대학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데서야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다. 본래 인재양성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법이다. 재정문제 해결에는 종단이

나설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중앙승가대의 운영책임이 이사회에 있고 총무원장이 바로 이사장을 맡고 있지 않는가. 중앙승가대를 진정한 종단의 기본 교육기관으로 키워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교구 본사들에게서 분담금을 각축하는 등 구체적인 재정마련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물론 승가대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립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안암학사를 활용한 임대사업과 그동안 배출한 1천여 동문들을 활용하는 후원회 결성도 필요한 일이다.

늘 지적되는 일이지만 휘청거리고 있는 중앙승가대에 가장 시급한 일은 학인들의 수행기풍 강화이다. 종립대학의 모범이 되는 지행합일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보일 수 있는 승풍진작에도 역점을 두기 바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중앙승가대의 위기는, 승가대의 발전이 곧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상대방 타탄을 할 것이 아니라 종단의 3대 사업중 가장 중요한 일도 제양성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종단과 학교, 동문회 등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운문사 사하촌 새단장

음식점 138동 철거...200m밖 집단시설지구 조성

국내 최대의 사미니 강원(학인 270명)이 있는 청도 운문사(주지혜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사하촌 정비가 마무리됐다.

최근 운문사 입구 경내지에 있던 음식점마을(숙정 사기점마을)이 수십 년 만에 철거돼 운문사 일주문 주변이 말끔히 단장된 것. 지난해 3월 공주 동학사 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뤄진 이번 운문사 사하촌 정비사업은 전통사찰 주변 집단 상가 지역의 정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수행환경 보호의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운문사와 청도군은 10여 년 전부터 운문사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 사기점마을내 무허가 음식점들의 철거를 시도해왔으나 그때마다 업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강제철거계획을 연기해왔다.

그러나 올해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들어가면서 지난 7월 2일부터 200여명의 공무원 동원, 철거작업을 시도해 2주일만인 7월 15일 21가구 138동의 음식점 건물들 모두 철거됐다. 이들은 조성중인 운문산 집단시설지구에서 수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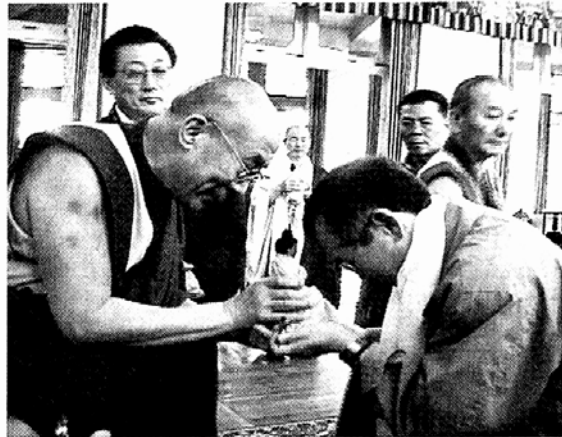
운문사 입구 사찰 경내지에 사기점마을이 조성된 것은 90여 년 전. 당시 운문사 밑에 5,6가구가 있었으나 전국에서 운문사를 방문하는 신도들과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자 음식점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 음식점 집성촌이 됐고 운문사 수행환경을 어지럽히는 골칫거리로 전락돼왔다.

한편 청도군은 운문사주변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기점마을 식당촌을 철거함과 동시에 200m 떨어진 신원리 일대에 16억원의 예산으로 16만2천㎡(4만9천여 평) 규모의 집단시설지구를 조성중이다. 현재 83%의 공정률로 올해 말 개장예정이며 관리사무소와 야영장을 비롯, 주차장과 숙박시설, 오수처리장, 상가 등이 들어선다.

운문사 교무 석우 스님은 "당초에 사찰 주변에 음식점 등이 들어서서 것을 막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이번에 사하촌 정비사업이 일 단락돼 수행교육도량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면서 "운문산 집단시설지구 역시 사찰과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관광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jm@buddhapia.com



▷박광서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 공동대표가 달라이 라마로부터 불상을 선물 받고 있다. (사진제공=불교저널 21)

달라이라마-방한 준비위 만남

한-티베트 문화교류 협의...수용소 등 방문

"그동안 저를 초청하기 위해 애써 주신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3년에는 꼭 불교 항제 국인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연기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요(웃음)."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7월 19일 인도 다람살라 망명정부에서 달라이라마방한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성관 박광서)를 접견한 자리에서 2003년 방한을 희망하면서 한국 종교인과의 교류, 한-티베트 불교문화의 교류 등을 제안했다고 방한준비위가 밝혔다. (성관스님 인터뷰 4면)

7일간의 다람살라 방문일정을 마치고 7월 23일 귀국한 방한준비위는 당초 달라이 라마 방한 무산에 따른 참회 방문을 계획했으나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잘 아는 다람살라 측의 만류로 불교문화 교류와 티베트 문화 이해를 위한 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티베트망명정부로부터 국민급 대우를 받은 45명의 방문단은 이번 일정동안 인도명 티베트 성지 라다크의 난민수용소와 전통 병원, 다람살라의 어린이학교와 전통문화연구소 등을 방문, 라다크와 다람살라에 각각 1만불씩의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한-티베트의 불교문화 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광서 방한준비위 공동대표는 "앞으로 티베트 불교문화의 한국 소개와 달라이 라마 방한운동은 물론 티베트 학생의 한국 대학입학 지원, 티베트 어린이 교육비 지원, 한국 종교인 티베트 방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하산...

"강원-승가대 명칭 골라 쓰세요"

강원교직자련 모두 허용...지오스님 회장 재선출

전국강원 교직자연합회는 7월 25일 동학사에서 총회를 열고 강원 또는 승가대라는 명칭을 골라 쓰세요"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각 강원(승가대)의 재정에 따라 명칭을 사용키로 결의했다.

한영우 기자

30일 태고종 승려대회

협상편 구종법회 변경

'태고종 종단 바로세우기연합(위원장 최화)'이 준비하는 '태고종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가 7월 30일 오후 1시 신촌 봉원사(또는 성북구 태고종 총무원사에서 개최된다(7월27일 오후 8시 현재). 그러나 태고종 분규에 대한 교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태고종 총무원측과 종단 바로세우기 연합 측이 △혜초 총무원장을 제외한 현 집행부 일괄 사퇴 △승적률 정적당항 9명 스님 복직 △세심 '7인방' 스님 공직에서 모두 사퇴 등 현안에 대해 계속 물밑대화를 계속(27일 현재)하고 있어 양측의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승려대회는 태고종 발전을 위한 구종법회로 변경되어 개최될 전망이다. 이경숙 기자

동국대 비구니 폭행 물의

현각스님 징계요구

동국대학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세영)는 7월 24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국대 비구니 교수 폭력 사건 피의자인 현각 스님을 적절히 조치하고, 개전의 징이 없을 경우 징계 회부하라고 조계종 총무원 회부부에 요구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 사회단체 사업 8곳 선정

조계종 3200만원 지급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7월 18일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에 응모한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신라문화원, 불교장기수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지리산 살리기 댐 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 사찰환경연구회 등 8개 단체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들 8개 단체에는 총 3,2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급된다. 이번에 선정된 8개 불교단체는 환경관련분야(연구조사 포함) 3단체, 인권활동 관련분야 2단체, 복지관련 분야 1단체, 평화운동 관련 분야 1단체, 생명운동 관련분야 1단체 등이다.

이번 제1회 공모사업에는 총 15개 단체가 응모했으며, 불교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파급력 및 영향력, 공모사업의 완성성, 사업의 타당성과 수행능력, 예산확정 및 배분의 타당성, 단체의 신인도 등 총 5개 항목으로 심사하여 8개 단체를 선정했다.

한편 조계종은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불교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지방의 불교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매년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성명서

통도사주지 직무수행 임명과 관련하여 원산 스님(법하스님, 영배스님)의 일방적인 요구로 현문 스님과 합의 작성된 7월 12일 합의서는 종원총법회 총법회결정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합의서가 종원총법회의 상위로 명시되어 있기에 영축총림 대중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1. 현문 스님을 주지(직무대행)로 먼저하고 차기주지는 양 문중이 원산 스님을 추대한다.

위 사항은 총법회결정문 제 13조에 의한 총법회결정의 고유권한으로 총림의 주지는 방장의 추천에 의해서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합의서로 임명될 수 없다.

1. 부방장으로 청하 스님을 모신다.

원하 스님 문중이나 경봉 스님 문중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방장 임명은 총법회결정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부방장 임명권은 총법회결정의 고유권한으로 합의 사항이 될 수 없다.

1. 종무소 7직과 박물관장은 원산 스님이 지명하며 임명된 7직과 박물관장은 주지(직무대행)가 해임하지 못하며 7직중 재우는 주지에게 지명권을 준다.

지방총장 제 11조에 의하여 본사주지가 소속종무원을 임명하고 직무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욕에 의하여 전래가 없는 임명권을 요구한 것도 종법 위반 사항이다.

1. 부주지는 임명하지 않는다.

부주지 임명 사항 역시 지방총장 제 14조에 의한 본사주지의 권한 사항으로서 합의 사항이 될 수 없다.

1. 표창사와 미타암 중 1개 사찰을 원산 스님이 지명하는 스님으로 주지를 임명한다.

발사주지는 본사주지의 품신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종법이 규정하고 있다. 현재 표창사와 미타암주지는 임기중에 있으며 종무원에 있어서 직무상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있는 특정사찰을 지정하여 요구한 것은 삼보정체에 욕심을 낸 사욕이며 이 또한 종원총법회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1. 동대 이사 후보로 추천된 영배 스님을 통도사대표로 인정한다.

위 사항은 통도사주지 임명 사항과는 상관없는 일방적인 요구사항이며, 통도사의 대표는 두 스님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1. 본사주지(직무대행)임명, 7직과 박물관장 임명, 표창사와 미타암 중 1개사찰 임명은 주지임명과 동시 15~30일 이내 처리한다.

본사와 총무원의 적법 절차에 의해 임명되어 종무를 운영하는 소인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행위로서 이것 또한 종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영축총림 대중은 분노한다.

1. 향후 합의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화합을 도모한다.

위 내용은 총림과 종무소의 모든 업무관청에 대하여 사전협의·보고·결재를 거쳐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지방총정법 제 13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다.

1. 위의 합의사항이 한 개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총무원장 스님은 주지(직무대행)를 즉시 해임한다.

위 사항은 이 합의서가 조계종 종원총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무원장 권한·총림방장 권한·본사주지 권한보다 상위법으로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조계종 본사주지 임명에 있어서 전래가 없는 이 합의서는 종원총법을 완전히 부정하고 통도사를 마치 문중대립이라는 파벌양상으로 세간에 비추게 한 후 몇사람의 개인 사욕에만 치중해 종단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총림을 유린하는 내용이다.

영축총림 대중은 분노한다.

위 합의서 전문은 법학, 영배 스님이 초안하여 원산 스님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부득이한 상황에서 현문 스님은 날인하였고, 통도사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총무원장 스님은 고육지책으로 증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영축총림의 운영권(방장권)과 인사권(주지권)은 원산 스님에게 있고, 영배·법하 스님은 본사주지 임명을 기화로 하여 동국대 이사취임을 위한 총림의 대표성 인정과 박물관이란 특정소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재정이 우량한 사찰을 지정 요구하여 개인의 탐욕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차기 통도사주지를 운문하면서 종원총법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하는 폐악을 드러낸 것이다.

영축총림 대중은 대중의 총의마저 무시한 이 합의서의 합의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으로 총림 대중화합과 총림 위상회복을 위해 이 후부터 종무원체에 관한 권한은 신임주지 현문 스님이 행사토록하여 총림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총림대중의 뜻으로 결의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 2545년 7월 25일
영축총림 대중일동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382-7182, 전수 055)382-7196